

이대통령 “방중, 생각보다 많은 진전… 中, 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

순방 마지막날 상하이서 기자단과 오찬 겸 간담회
“한한령 해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 곧 실제 협의”
“한반도평화 중재” 요청… 시 주석 ‘인내심 필요’ 얘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7일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의 단계적 해제와 매년 한중 정상회담 정례화 등 양국 관계 복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감정이나 ‘국의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하에 관리하겠다고 하며,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 회복을 위해 판다 ‘푸바오’의 대어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오찬 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외교 일정이 이번 방중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떠러야 될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고 소개하며 “한중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이며 불필요하게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과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 한한령 해제 “시 주석 ‘과일은 때 되면 익어’…명확한 해결 의사”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을 전하며, 단계적 해제를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느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했다”며 “이는 정확한 표현으로, 조진 정도가 아니라 (해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기나 방식, 분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지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이 이해해야 된다.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北 소통 차단돼 중에 ‘중재자’ 요청…시 주석 ‘인내심 필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화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고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여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 역시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인내심’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며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었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상하이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니 그 대가를 지급하고 중단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 목표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점근)의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중국에) 했고,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 시 주석 ‘역사 올바른 편’ 발언엔 ‘공자 말씀으로 들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자님 말씀으로 들으셨다”며 “착하게 잘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특별히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시 주석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 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라고 (시 주석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 “협중 조정행위 억제해야…판다 ‘푸바오’ 대어 요청도”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혐한·혐중 정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은 없애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론 같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다.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중·협한을 조장,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려고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한류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등이 혐중 정서의 발미가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공격의 발미가 되니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한중 관계가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특정해서 대어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

통령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청나라 시대 유물인 석사자상 한 쌍을 기증한 것을 언급하며 “푸바오’라도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일년에 한번 이상 한중 정상회담…中, 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매년 한 차례씩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일 년에 한 번씩은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시 주석)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며 “(형식을) 신경쓰지 않고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급 대화도 계속 해야 한다”며 “외교, 통상, 산업, 학술 분야, 지방정부 차원도 있는데 정당한 대화도 실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필요하다면 군사 분야도 대화 격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 각급 별로 대화를 좀 확대 하자는 입장이고, 중국 측도 공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동관리수역 내 경계를 명확히 확정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하게 두고 그 안에서 각자 사용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중일 갈등엔 “나서면 도움 안 될 수도”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에 대한 중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른들이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툰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가 있다”며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중국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 상임위 통과
지역 차등지급은 올해만
‘아동수당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대구·부산도 지역별 차등 지급 포함
이번주 통과 시 이달부터 정상 지급

여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했다.

7일 정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된다.

지역 차등 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 위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대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 지역은 11만~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차등 지급 지역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 절차 등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본회의가 열린다면 25일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이보다 늦어지면 국무회의의 공포 등 시간 등을 고려해 2월에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